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법전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법의 법전화는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국제연맹체제에서도 국제법의 법전화가 시도되었다.
- ③ 유엔헌장상 국제법의 법전화를 장려하는 것은 총회의 임무에 속한다.
- ④ 국가들이 현행 국제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작업에 의존하는데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 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대부분의 규정은 기존 관습국제법을 성문화한 것이다.

문 2. 국제법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국제법인격을 인정받고 있다.
- ②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법 주체성을 갖는다.
- ③ 반란단체가 제한적으로나마 국제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반란이 발생한 국가의 일정지역을 실효적으로 점거하여야 한다.
- ④ 교황청은 조약체결권을 가지며 각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 ⑤ 팔레스타인은 유엔총회에서 상주옵저버국으로서 표결권을 갖는다.

문 3. 국가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신생국은 다자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그 조약의 타당사국들로부터 국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신생국이 타국과 상호 통상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는 경우 그 국가로부터 국가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가승인 여부는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될 수 없다.
- ④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상호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정식 외교관계가 개설되지 않은 국가간에도 국가승인이 가능하다.

문 4. 국가간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문제란 한 국가의 영토 상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 ② 권고나 제의는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
- ④ 국내문제 불간섭은 일반국제법상의 의무이다.
- ⑤ 국내문제 불간섭은 강행규범적 의무는 아니다.

문 5. 국제법상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관이 직무상으로 취한 상업적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② 어느 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국제법상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③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86년 니카라과사건에서 미국이 콘트라반군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 상황만으로는 콘트라반군의 행위를 미국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④ 공적 기관의 부재 또는 마비로 인하여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사실상의 공권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⑤ 국가는 그 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문 6. 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개별적 자위권은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나 집단적 자위권은 그렇지 않다.
- ② 유엔헌장은 무력공격 또는 그 급박한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자위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자위권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허용된다.
- ④ 자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필요성(necessity)은 요구되나, 비례성(proportionality)은 요구되지 않는다.
- ⑤ 자위의 조치는 국가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조각 사유에는 속하지 않는다.

문 7.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교관의 개인 주거공간은 공관지역과 동일한 불가침을 향유한다.
- ② 접수국은 외교관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한다.
- ④ 외교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3국은 그 외교관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
- ⑤ 접수국은 파견국의 동의 없이 파견국의 공관부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문 8.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중국적자가 제3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두 국적국 중 어느 국가도 그 위법행위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국가는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국민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ㄷ. 원칙적으로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그 국가의 국내법상의 구제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피해자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무국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ㅁ.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국적은 피해의 발생시부터 국제청구에 의한 해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9.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국제법에서는 오직 국가만을 국제법의 주체로 보았을 뿐, 개인은 국제법의 객체에 지나지 않았다.
- ②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일반적으로 개인에게는 조약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국제재판소에서 아직까지 개인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들어와 국제형사재판을 통하여 전쟁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하였다.

문 10.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2006년 유엔국제법위원회(ILC) 「외교적 보호에 관한 초안」상 난민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는 자국의 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을 추방할 수 없다.
- ② 국가는 불법입국한 난민에게 불법입국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불법입국만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 ③ 난민은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에서만 추방될 수 있다.
- ④ 난민은 그가 합법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⑤ 국가들은 그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 1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종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그 조약의 종료를 위하여 이를 원용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자신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조약의 종료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 ③ 양자조약의 한 당사국이 조약의 대상과 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타 당사국은 조약의 종료사유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 ④ 새롭게 출현하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⑤ 조약 당사국간에 외교관계가 단절되면 양국간의 모든 조약은 종료한다.

문 1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환문서 또는 교환서한과 같은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도 동의표시가 될 수 있다.
- ② 서명이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약에서 규정하는 경우, 서명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 또는 승인에 의해서도 동의가 표시될 수 있다.

- ④ 조약의 일부에 대해서만 구속받겠다는 동의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하지 않다.
- ⑤ 국가대표가 추후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 그 조약에 의하여 구속받겠다는 동의는 비준에 의하여 표시된다.

문 13.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 ②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당사국들에게 그 해결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유엔총회의 권고가 없는 경우에도 강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써 결정된다.
- ⑤ 어떠한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다.

문 14.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기 위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한다.
- ②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그 상부수역이나 수역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연안국은 명시적인 선언을 통해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 ④ 모든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연안국의 대륙붕에 해저 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자격을 갖는다.
- ⑤ 연안국은 대륙붕에 안전수역을 설정할 수 있다.

문 15.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UN)협약」상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무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 ① 무기를 사용하는 훈련이나 연습
- ② 항공기의 선상 발진·착륙 또는 탑재
- ③ 국기를 게양한 잠수함의 해면 위 통항
- ④ 어로활동
- ⑤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의 수행

문 16.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을 도표화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분 류		해결수단
분쟁당사자간 해결		교섭 · (A)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정치적 해결	주선 · (B) · 심사 · 조정
	법적 해결	(C) · 사법재판

- | | | | |
|---|----|----|----|
| | A | B | C |
| ① | 협의 | 중개 | 중재 |
| ② | 패널 | 중재 | 중개 |
| ③ | 중개 | 협의 | 패널 |
| ④ | 패널 | 중개 | 중재 |
| ⑤ | 협의 | 중재 | 중개 |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및 그 부속서에 부합하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에 언급되는 국가들은 모두 WTO 회원국임)

- ㄱ. A국의 甲기업은 B국에 자사 상품을 수출하던 중, B국이 수량제한조치를 취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甲기업은 B국을 WTO에 직접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 ㄴ. C국은 GATT 제24조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D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D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였으나 E국의 동종 상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였다. 이에 E국은 C국이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
- ㄷ. F국은 서면에 의한 탈퇴통보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에 G국에 대해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ㄹ. H국은 I국이 자국 상품을 차별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응하여 제재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하였다.
- ㅁ. J국은 K국의 행위가 반덤핑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국의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K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ㅁ

문 2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국내조치가 자국상품을 보호하도록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 ② 내국민대우원칙은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③ 관세부과 등의 국경조치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수입상품과 직접경쟁 또는 대체가능한 국내상품간 최소허용기준을 넘지 않는 과세율의 미소한 차이는 허용된다.
- ⑤ 일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제품의 혼합·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국내수량규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노동법

문 1.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 ②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 거부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문 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③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이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후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 ③ 노동조합의 동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동의로 족하다.
- ④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 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 문언상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문 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이다.
- ②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 ③ 사용자는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문 5. 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②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말한다.
- ③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⑤ 재해보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 6.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④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한도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해 주어야 한다.
- 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출근을 산정에 관하여 출근한 것으로 본다.

문 7.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②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노동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 ③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은 체결·비준되더라도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문 8. 노동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라도 상시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ㄴ. 선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보다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 ㄷ.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ㄹ. 「근로기준법」은 종교단체와 같은 비영리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9.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 ④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해고의 예고한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이와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이메일에 사용자의 해고의사 및 그 사유와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메일에 의한 통지도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문 10. 노동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ㄴ.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 ㄷ.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경우, 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 ㄹ.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ㄴ. 근로자의 채용·배치
- ㄷ. 근로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 ㄹ.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문 12. 부당해고 구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함은 양 제도 모두 동일하다.
- ②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양 제도 모두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④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그 자체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으로 복직명령과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문 13.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 ②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는 장애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⑤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 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가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육아휴직의 기간은 자녀당 2년 이내로 한다.

문 15.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 기간 중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 ③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문 16.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 ㄴ.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이 없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ㄷ. 유니언 쉘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그 불이행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ㄹ.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문 17.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이 다소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다.
- ③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대의원회의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 ④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조정종료 결정이 없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의 출입·조업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문 18. 사용자의 쟁의행위 및 대체근로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후에 방어적으로만 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직장폐쇄의 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③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일반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문 19. 노동위원회의 조정(調停)과 중재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일반사업에서 조정기간과 중재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동일하다.
- ② 조정안과 중재재정 모두 관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과 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 ④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는 각각 사적 조정과 사적 중재로 대신할 수 있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서에 대한 해석과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은 그 효력이 다르다.

문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나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자를 위한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 ②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④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그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 시정 요청은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 ⑤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한다.

문 22.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분리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파업 중이라는 사정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해당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 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설립된 복수의 노동조합은 각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문 23.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단체협약의 내용 중 해고사유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효력이 없다.
- ②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의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영상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
-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한다.

문 24.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
- ② 노동위원회는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룰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근로자의 사적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② 시설물의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
- ③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중 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④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 ⑤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국제거래법

문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본다.
- ② 당사자는 협약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 ④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 ⑤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은 특히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과 관련이 없다.

문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 ㄴ. 매도인이 계약체결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개인용·가죽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사실을 안 경우 협약은 그 매매에 적용된다.
- ㄷ.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문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매매계약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영업소가 없는 상대방이 우편주소를 가지고 있으나, 청약이 상대방의 우편주소가 아닌 상거소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청약은 상대방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 ② 승낙을 의도하고 있다면,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 ③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 ④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승낙기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을 상대방에게 발송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문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청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물품을 표시한 계약체결의 제안이 물품의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지 않고 그 결정을 위한 조항만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 ② 1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기만 하면 청약이 된다.
- ③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청약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도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 ④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⑤ 승낙기간이 지정된 청약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문 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손해배상액과 손해경감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손해경감의무는 매수인만이 부담하는 의무에 속한다.
- ㄴ. 매수인이 협약 제75조에 따른 대체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협약 제76조에 규정된 시가에 의한 손해액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76조에 따른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시가는 해제시의 시가에 같음하여 물품 수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문 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해제로 매도인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계약해제로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 ⑤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어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과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문 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운송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ㄴ. 계약체결 후 일방 당사자의 신용도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ㄷ.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도인이 그 장소로 물품을 발송한 때 이전한다.
- ㄹ.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였거나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은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에게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물품의 특별한 목적에 맞아야 한다.
- ②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되는 물품은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되는 물품은 그러한 물품의 포장에 대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야 한다.
- ④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협약 제35조 제2항의 물품적합성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에 발생한 부적합의 경우, 그 부적합이 매도인이 일정기간 특정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보증의 위반에 해당하여도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 9.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일부 인도와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추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한 경우, 인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문 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이 되는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수 없다.
- ③ 매도인은 계약 또는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수인이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 ⑤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는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문 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 외에도 물품인도의무와 서류교부의무를 진다.
- ㄴ. 매도인이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한다.
- ㄷ.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ㄹ.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중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2.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이 제1운송인 甲에게 물품을 교부하였고, 甲은 매도인에게 물품이 명확히 특정된 선하증권을 교부하였다. 그 후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 물품의 훼손이 발견되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적용을 전제로 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매수인이 협약상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함)

- ① 매도인이 甲에게 물품을 교부한 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전 운송도중에 그 물품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훼손되었다면, 매수인은 훼손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② 물품이 이미 훼손된 상태로 甲에게 교부되었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매도인이 물품을 포장하였으나 통상적인 포장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운송도중에 물품이 손상되었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④ 만약 물품이 甲에게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 ⑤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甲에게 물품운송 관련 주의사항을 지시하지 않아 운송 중에 물품이 훼손되었다면, 매도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 13. 「국제사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소가 없는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 ② 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상거소지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 ③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본인은 대리의 준거법을 유효하게 선택할 수 있다.
- ④ 선장의 대리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 ⑤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문 14. 국제사법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서 (A), (B), (C), (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준거법이 본국법으로 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으로 국적의 개념을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A) (이)라고 한다.
 ㄴ. 문제가 된 법률관계가 국제사법상 어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B) (이)라고 한다.
 ㄷ. 각국 국제사법 사이의 소극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C)이다.
 ㄹ. 국제사법상 부부간 상속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혼인의 유효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혼인의 유효성 여부를 (D) (이)라고 한다.

A	B	C	D
① 외국법의 조사	적용문제	선결문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② 적용문제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준거법의 회피	연결개념의 확정
③ 연결개념의 확정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반정	선결문제
④ 선결문제	적용문제	반정	외국법의 조사
⑤ 연결개념의 확정	반정	외국법의 조사	선결문제

문 15. 「국제사법」상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원은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외국의 국제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ㄷ.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 16. A국법에 따라 설립된 甲회사는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 C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회사는 B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 甲회사와 乙회사는 D국에서 준거법을 E국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위 매매계약의 방식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E국법 ② A국법, C국법
 ③ D국법, E국법 ④ 대한민국법, B국법
 ⑤ 대한민국법, D국법, E국법

문 17. 「국제사법」 제12조에는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한민국에서 실종이 발생한 때
 ㄴ.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는 때
 ㄷ. 대한민국에 그의 상거소가 있는 때
 ㄹ.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ㅁ.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8. 「국제사법」 제27조에 규정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의 상대방은 자신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 소비자는 자신의 상거소지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문 19.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선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ㄴ.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ㄷ. 준거법이 계약체결 후 변경되는 경우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도 소급하여 변경된다.
 ㄹ.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문 20. 「국제사법」상 혼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에 의한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
 ③ 혼인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④ 부부재산제의 일반적 효력에 관하여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⑤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문 21. A국법에 따라 설립된 甲회사는 그가 제조한 기계제품 100대를 B국법에 따라 설립된 乙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乙회사와 C국에서 체결하였다. 甲회사는 A국에서 지급인을 乙회사, 지급지를 D국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A국 소재 丙은행에 교부하였다. 만약 丙은행이 위 환어음을 보관 중에 도난당하였다면, 「국제사법」상 위 환어음의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의 준거법은?

-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대한민국법

문 22.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 준거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불법행위지법
 ㄴ. 불법행위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지법
 ㄷ. 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대한민국법
 ㄹ.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

- ① ㄱ-ㄴ-ㄷ-ㄹ ② ㄱ-ㄷ-ㄴ-ㄹ
 ③ ㄴ-ㄱ-ㄷ-ㄹ ④ ㄷ-ㄷ-ㄱ-ㄴ
 ⑤ ㄷ-ㄷ-ㄴ-ㄱ

문 23. 미국 국적의 甲은 대한민국에 A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A토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B토지를 구입한 일본 국적의 乙은 B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A토지의 일부(C토지)를 자기의 토지로 알고 자신의 전원주택 부지에 포함하여 텃밭으로 만들었다. 「국제사법」상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이 乙에게 C토지에서 채굴되어 C토지 상에 보관 중인 자연석(自然石)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미국법이다.
 ② 甲이 乙에 대하여 C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미국법이다.
 ③ 甲이 C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권 침해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일본법이다.
 ④ 乙이 자신의 전원주택에 대하여 중국 국적의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전세권설정증기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⑤ 乙이 C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취득시효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가의 준거법은 그 점유 개시 당시의 대한민국법이다.

문 24. 「국제사법」상 물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
 ㄴ. 항공기에 관한 물권 - 그 운행허가국법
 ㄷ. 지식재산권의 보호 - 그 등록국법
 ㄹ.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 - 그 출발지법
 ㅁ. 선박에 관한 물권 - 선적국법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문 25. A국 국적의 甲은 2010. 5. 5. B국 국적의 乙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그 후 甲은 A국 국적을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C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乙은 B국 국적을 유지한 채 D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다. 그런데 甲의 乙에 대한 유기(遺棄)로 부득이 乙은 대한민국 법원에 파양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국제사법」상 파양의 준거법은? (단, 위 모든 국가는 파양을 인정함)

- ① A국법 ② B국법 ③ C국법
 ④ D국법 ⑤ 대한민국법

형 사 정 책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귀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소장은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특별귀휴 기간은 형집행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장은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해야 한다.
 ④ 미결수용자에게도 귀휴가 허가된다.
 ⑤ 특별귀휴 기간은 1년 중 20일 이내이다.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기소유예는 기소 전의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
 ②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③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을 실효됨이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④ 하나의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지만, 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일부의 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을 선고하되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다르다.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용자의 처우 중에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접견 및 서신수수 ② 종교행사의 참석
 ③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의 실시 ④ 작업의 부과
 ⑤ 수용된 거실의 참관 금지

문 4.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을 명할 경우 반드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해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③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위한 유치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이는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사유에 해당한다.
 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한다.

문 5. 다음 중 현행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보안처분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 ②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③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명하는 보호관찰
- ④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감호
- 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문 6.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할 수 있다.
- ㄷ. 주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에 부가하는 몰수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ㄹ.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이 있으면 추징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도 당연히 상실한다.
- ㅁ. 벌금은 확정판결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7.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 ① 수갑 ② 보호복 ③ 포승
- ④ 가스총 ⑤ 전자충격기

문 8. 소년형사사건의 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에게 선고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은 원칙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 ②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노역장유치 선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문 9. 「소년법」의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서 사회봉사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② 단기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은 1년이며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수강명령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④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문 10.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할 때에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대상 소년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동행할 수 있다.
- ④ 대상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없다.
- 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소년을 병원에 위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③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 ④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문 12. 암수범죄(Hidden crime)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개인적 편견에 따라 차별적 취급을 한 경우 암수범죄로 볼 수 없다.
- ② 수사기관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를 받고 범죄를 인지하여 해결한 경우 암수범죄로 볼 수 없다.
- ③ 암수범죄는 성매매, 낙태, 도박과 같이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한다.
- ④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수조사는 기억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자기보고조사는 보고자가 자신의 추가범죄사실에 대한 발각이 두려워 사실을 은폐하는 등 진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 13.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유족구조금을 받을 유족 중 부모의 경우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⑤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14. 범죄예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모델’은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 ② ‘범죄자 치료와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모델’은 주로 형집행단계에서 특별예방의 관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주택 및 도시설계를 범죄예방에 적합하도록 구성하려는 생각이다.
- ④ ‘상황적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 ⑤ 범죄예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은 경찰이지만 민간기관이나 시민들도 범죄예방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문 15.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복적 사법의 핵심가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요구까지도 반영하는 것이다.
- ②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르면 화해 또는 피해회복을 통한 형사책임의 면제·완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피해자와 가해자 및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재통합을 추구하는 형사사법이론이다.
- ④ 유엔은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내용에 따라 대면개념(encounter conception), 배상개념(reparative conception),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⑤ 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만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회복을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모으는 것을 포함한다.

문 16.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범행주체인 범죄자와 범죄는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되며, 범행대상인 피해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법적 개념으로 형사입법을 통해 범죄인지 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 ③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④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므로 사회심리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일탈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 알코올중독이나 자살기도, 가출 등이 이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17. 다음 설명의 내용과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기본적으로 사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가.”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다.
- ㄴ. 경험과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로써 보통 새로운 형사제도의 효율성을 점검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 ㄷ. 일정 시점과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조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수직적 비교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 ㄹ. 1937년 서덜랜드(Sutherland)가 실시한 직업절도범 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 | |
|-------------|--------------|
| A. 개별적 사례조사 | B. 범죄통계표의 분석 |
| C. 추행조사 | D. 실험적 방법 |

- ① ㄱ - A, ㄴ - B, ㄷ - D, ㄹ - C
- ② ㄱ - B, ㄴ - C, ㄷ - A, ㄹ - D
- ③ ㄱ - B, ㄴ - D, ㄷ - C, ㄹ - A
- ④ ㄱ - C, ㄴ - D, ㄷ - A, ㄹ - B
- ⑤ ㄱ - C, ㄴ - B, ㄷ - A, ㄹ - D

문 18. 사회심리학적 방법을 기초로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접촉과정을 중시하여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을 제시한 이론은 무엇인가?

- ①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의 행동심리이론
- ② 뒤르켐(Durkheim)의 범죄정상설
- ③ 파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
- ④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이론
- ⑤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

문 19.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 모두 범죄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
- ② 낙인이론이 범죄인 개인과 형사사법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면 비판범죄학은 범죄인 집단과 국가권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 ③ 낙인이론은 국가의 범죄통제가 오히려 범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감하게 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비판범죄학에 의하면 범죄인 가운데 하층계급의 사람들이 많은 것은 국가가 이들의 범죄만을 집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다.
- ⑤ 비판범죄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범죄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국가범죄나 기업범죄 등 자본가계급의 범죄는 범죄학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 20. 다음 설명의 내용과 범죄이론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소년법은 우리가 그를 나쁘다고 규정하고, 그를 선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게 된다.
 ㄴ. 입법이나 사법활동은 사회구성원 대부분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권력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된다.
 ㄷ. 비행은 저지르려고 하다가 부모가 실망하고 슬퍼할 것을 떠올리고 그만두었다.
 ㄹ. 싸움이나 사고치는 것은 스릴 있는 일이며, 사고를 치더라도 체포와 처벌을 교묘히 피한다면 멋있다.
 ㅁ. 오로지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기업이익을 위해서라면 규범위반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

- A. 갈등론적 범죄론 B. 범죄적 하위문화론
 C. 낙인이론 D. 학습이론
 E. 통제이론

- ① ㄱ - C, ㄴ - A, ㄷ - D ② ㄱ - B, ㄴ - C, ㄹ - E
 ③ ㄴ - D, ㄷ - A, ㄹ - B ④ ㄴ - C, ㄹ - B, ㅁ - E
 ⑤ ㄷ - E, ㄹ - B, ㅁ - D

문 21. 다음 범죄이론의 내용과 주장자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보다 크기 때문이다.
 ㄴ. 범죄로 이끄는 힘이 범죄를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ㄷ. 성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목표와 수단의 괴리가 커지게 될 때 범죄가 발생한다.
 ㄹ. 개인이 일상적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가 범죄발생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며, 개인과 사회 간의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믿음(belief)의 네 가지 관계를 중요시 한다.
 ㅁ. 하류계층의 비행은 범죄적 · 갈등적 · 은둔적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한다.

- A.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B. 레크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
 C. 클로이드(Cloward)와 올린(Ohlin)의 차별적 기회이론
 D. 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
 E.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

- ① ㄱ - D, ㄴ - B ② ㄱ - B, ㄷ - E
 ③ ㄴ - A, ㅁ - C ④ ㄷ - D, ㄹ - A
 ⑤ ㄹ - D, ㅁ - C

문 22.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중화기술(中和技術)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범죄자 甲은 타인 乙의 재물을 절취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② 범죄자 甲은 타인 乙의 재물을 횡령하면서 사후에 대가를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였다.

- ③ 범죄자 甲은 병역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④ 범죄자 甲은 특수절도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인 乙 및 丙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⑤ 범죄자 甲은 수뢰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 乙의 강제추행사실을 비난하였다.

문 23. 통제이론(Control theory)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통제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본다.
 ② 통제이론은 특히 하층계급의 중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③ 허쉬(Hirschi)는 개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의 기회가 증가하여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④ 나이(Nye)는 사회통제방법을 직접통제, 간접통제, 내부통제로 나누고, 소년비행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부통제라고 보았다.
 ⑤ 레크리스(Reckless)는 올바른 자아관념이 비행에 대한 절연체라고 보았다.

문 24.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② 현행법상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내지 보석을 제한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④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르면 법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보좌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형사공판절차에서 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문 25. 범죄예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범죄예측이란 예방, 수사, 재판, 교정의 각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가능성이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ㄴ. 통계적 예측법은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그 점수에 따라 범죄행동을 예측하므로 실효성이 높고, 비교적 공평하며, 예측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ㄷ. 임상적 예측법은 정신과 의사나 범죄심리학자가 조사와 관찰 등에 의해 행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이므로 판단자의 자료해석의 오류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위험이 있다.
 ㄹ. 글뤽(Glueck) 부부는 범죄예측과 관련하여 특정항목의 점수를 가중하거나 감점하는 '가중실점방식'이라는 조기예측법을 소개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